



어려운 대외여건 속에도 조기·최초·최대의 국정성과 창출

- 국무조정실, 1분기 국정과제 추진상황 국무회의 보고 -

- 국무조정실(실장: 윤창렬)은 123대 국정과제의 1분기 추진상황을 4월 6일(월)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.
- 정부는 그간 ‘속도’, ‘성과’, ‘소통’, ‘홍보’에 중점을 두고 ’26년 국정과제를 추진·관리해왔다.
 - 그 결과 123대 국정과제 대부분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, 특히 혁신경제와 균형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
 - 국정과제 관련 법령도 1분기 중 111건(법률 79건, 하위법령 32건)을 포함해, 총 247건(법률 155건, 하위법령 92건)이 제·개정 완료되었다.
- 정부출범 2년차를 맞아 신속한 정책집행 및 입법 노력에 힘입어,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1분기 동안 국정 전반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확인되었다.

* (붙임) 2026년 1분기 국정과제 주요 성과

- AI 기반 대국민서비스가 본격화되었고, 행정통합과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균형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.

- 특히, 법률구조 통합플랫폼을 조기 개통하였으며, 코스피와 수출액은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고, 독자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-21의 양산 1호기 출고와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등 조기 달성, 역대 최대·최초의 기록적인 성과도 있었다.

□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 출범 1주년(6.4일)까지 ‘이행 독려’, ‘종합 점검’, ‘정리·확산’의 3단계 전략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.

-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리스크 과제와 비상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당·정·청 협력을 통해 신속한 입법을 추진한다.
- 또한,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고, 혁신성장, 민생안정, 국민안전, 비상경제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국민 체감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.
- 아울러 국정성적을 국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, 정책효과를 체감도 있게 전달해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실	책임자	국 장	최용선 (044-200-2508)
		담당자	사무관	박찬우 (044-200-2470)
담당 부서 <국정입법>	법제처 국정입법상황실	책임자	과 장	송정은 (044-200-6847)
		담당자	사무관	이아람 (044-200-6845)

□ 조기달성, 최대·최초 성과

구분	내용	
조기	✓법률구조 통합플랫폼 개통(上→ 1월) ✓전세사기 피해예방 강화(12월→ 2월)	✓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(上→ 1월) ✓노동안전 종합대책 입법(6월→ 1월)
최대	✓코스피 역대 최고치 경신 ✓CES 혁신상 역대 최대 수상	✓역대 최대 분기 수출액(2193억불^{잠정}) ✓최대 설 성수품 공급·할인지원
최초	✓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개통 ✓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	✓「전남광주통합법」 제정 ✓한국형 전투기(KF-21) 양산 1호기 출고

□ 국정목표별 주요 성과

국정목표	내용
국민이 하나되는 정치	■(개헌·개혁) 국민투표법 개정, 공소청중수청법 제정, 국민의 군대 구현(정보기관 개편, 헌법준중TF) ■(사법체계 개선) 법률구조 통합플랫폼 개통,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, 법원조직법 개정 ■(대국민서비스 혁신)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개통, AI 소통민원분석(국민신문고) 도입 ■(보훈보상 강화) 제대군인 의무복무 경력 인정 의무화, 준보훈병원 도입근거 마련
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	■(자본시장 혁신) 「상법」 3차 개정, 주가조작 대응 강화, MSC 선진지수 편입 종합로드맵 ■(혁신성장) 국가R&D 예타 폐지, 「반도체특별법」 개정, 규제합리화 추진체계 격상 ■(AI 3강 도약) 독자AI 파운데이션 1차 평가·선정, 「가칭 공공 AI법」 입법 ■(창업·벤처 활성화)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, 기금 벤처투자 확대, 벤처펀드(4.4조원) 조성계획
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	■(지역주도 성장) 「전남광주통합법」 제정, 새만금 투자협약(로봇수소AI),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■(생활비 경감) 설 민생안정대책, 모두의 카드 출시,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■(상생 기업환경) 한국형 증거개시 도입,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확대, 대중소기업 상생전략 ■(농어촌 육성)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개시, 농업·농촌 AX 전략,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출범
기본이 튼튼한 사회	■(양육환경 개선)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, 단기 육아휴직제 및 배우자 3종세트(휴가·휴직) 도입 ■(노동자 보호) 노동안전 종합대책 입법(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등), 중소기업 퇴직연금 확대 ■(재난피해 지원) 대규모재난 지원기구 설치근거 마련, 이태원참사 2차가해 방지 ■(교육·돌봄 강화) 초등돌봄·교육 확대, 무상교육·보육 대상 확대(5세→4~5세) 시행 ■(지역·필수·공공의료) 의사 양성규모 확정, 국립대병원 소관 복지부 이관,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, 지역의사법 시행(하위법령 제정) ■(기본사회) 기본사회초기 근거규정 제정
국익 중심의 외교안보	■(재외국민 보호) 대외정세(중동, 중남미) 대응 재외국민 생명·안전 보호 ■(실용외교) 한중·한일 정상회담, 총리 방미 등을 통한 주요국 실질협력 강화 ■(방산·자주국방) 한국형 전투기(KF-21) 양산 1호기 출고, 방산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